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史에 대한 關心動向⁽¹⁾

須 川 英 德

일본에서의 한국 연구는 역사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회에 소속된 200 300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의 한국 지배에 협력하는 조사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전후에 재개된 한국 연구는 舊京城帝國大學관계자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체적인 한국상을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경부터 젊은 세대가 연구의 제일선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한국과 북한의 연구가 일본에 소개됨에 따라서 정체론적인 한국상은 연구자 사이에서는 서서히 극복되어갔다. 또한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일본에 있어서 역사 연구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역사 연구의 관심동향과 불가분하다.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 연구는 천황제이데올로기와 군국주의에의 비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연구자의 수준에서도 일본이 침략한 아시아 제지역에의 관심은 낮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NIES 및 ASEAN 諸國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아시아 제지역으로의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1982년의 교과서문제는 ‘청산되지 않은 過去’의 존재를 일반시민에까지 자각시켰다. 그 속에서 일본을 주변 제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역사 연구의 방법이 차츰 채용되었다. 近年의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 연구는 현재의 일본의 영역을 전제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실체(민족·국가)가 존재해서 그것이 발전해왔다고 생각하는 一國史의인 발전사의 사고방식을 부정한다. 오히려 주변 제지역과 일본열도 제지역의 교류 및 지역적 다양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주변 제지역과의 비교 속에서 각각의 역사적 개성을 해명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역사 연구의 한 분야로서 한국사 연구도 행하여지고 있다.

1. 머리말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외국사 연구의 한 분야로서 한국사 연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연구 사정의 흐름을 개술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속담에서 말하는 “석가에게 설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는, 일본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생각해 가는 편이 어찌면 한일의 상호이해에 접근해 가는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 본고는 1997년 9월 24일에 행해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의 報告이다. 註登 일부 加筆을 제외하면 거의 원문대로이다. 개인적인 일이라 매우 慚懼하지만 필자가 3월부터 9월에 걸친 연구유학중에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신 경제연구소 鄭英一 교수, 安秉直 교수에게는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일일이 이름을 들지 못하나 그 외의 많은 선생님들, 경제연구소 행정실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욱이 필자의 한국사 연구 영역이 주로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植民地時期 이후에 관한 일본에서의 經濟史 分野의 연구에 대해서는(실제로는 이것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능력상 언급할 수 없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²⁾

2.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研究의 概括的 狀況

우선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 연구는 한국에 있어서의 韓國史 혹은 韓國經濟史 研究에 비하여, 당연한 일이지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연구자의 수가 적다. 그 때문에 한국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도 역사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朝鮮史研究會(關西部會·關東部會, 각각 월례연구회를 개최. 연 1회의 대회와 『朝鮮史研究會論文集』을 발행)와 역사·언어·문화인류학 등 넓은 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朝鮮學會(연 1회의 대회와 『朝鮮學報』를 연 4회 발행)의 두 학회가 주된 것으로서(어느 것이나 일본인 회원 수는 300-400명 정도, 단 중복이 있다. 또한, 조선학회에는 백수십 명의 한국인 회원도 있다), 한국경제사 또는 현대 한국경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와 한국민속학·문화인류학 등의 학회는 없다. 이들 분야의 연구자는, 각각의 전문학회등에도 소속하면서, 한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연구자가 적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역사적 이유로서, 戰後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 연구가 주로 역사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옛날의 總督府·京城帝大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연구가, 식민지배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現狀調査나 '舊慣' 調査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역사분야로 확대되어 간 사실과 비교해 보면, 四方博(시카타 히로시)·末松保和(수에마츠 야스카즈) 등 舊京城帝大 關聯의 연구자가 연속되기는 하지만, 現狀調査나 政策參考資料 등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던 부분이 빠져버림으로써, 한편에서는 단절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연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위 때문에 전후에 최초로 결성된 것이 天理大學에 본부를 둔 朝鮮學會였다(1950년 설립. 또 天理大學은 1925년에 천리교 포교를 하나의 목적으로 설립된 天理外國語學校를 모체로 하고, 개교당초부터 중국어·말레이시아어 등과 더불어 조선어과를 설치). 이에 대하여, 한일회담 등에서 보여지는 구태의연한 일본의 한국인식을 비판하면서, 전후의 신세대를 중심으로 재일한국인역사연구자(북한국적도 포함한다)도 참가하여 1959년에 결성된 것이 朝鮮史研究會였다(다만, 근년에는 정치적 성향이 없다고 해도 좋다).

(2) 식민지시기에 관해서는 예컨대 鄭在貞(1996)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당시는 한국사 연구에 뜻을 둔다고 하더라도 대학등의 조직에서 포스트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좋다(현재에는 상황이 아주 호전되어 있으나, 그것도 다른 분야에 비하면 아주 어렵다). 동양사라고 하면 중국사로서, 국립대학에서 朝鮮史學이라고 하는 포스트를 갖추고 있는 대학은 실로 東京大學文學部뿐이었다(그것도 戰前으로부터의 敎官이었던 池内 宏(이케우치 히로시)의 정년퇴직후에는 休眠狀態였다). 그 때문에 예컨대 학문적 관심에서 한국사 연구에 뜻을 둔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라고 하는 벽에 필연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재일한국인과의 관계도 연구상 필연적으로 맺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당연히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 연구나 외국 이해(특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의 양상에 대하여, 혹은 일본군대사에 대해서까지도 마지날(marginal)한 위치에서 보는 시선을 몸에 지니게 되고, 비판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단, 근년의 젊은 日本人留學生들에게는 그와 같은 감각이 희박하다. 그들은 수많은 외국 중에서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나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유학했다고 말한다. 옛날의 “가깝고도 먼 나라”로부터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20대인 그들과의 대화 중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왜 대학시절에 어학연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서, 88올림픽 이후의 경제발전에 성공한 부유한 이웃나라라는 이미지로 한국을 알고 있는 그들과의 감각의 차이를 통감했다. 개인적인 일을 언급해서 황송하지만, 필자의 대학입학은 1976년이며, 당시의 박정희정권하의 인권문제나 민주화투쟁의 보도에 접한 것이 한국사 연구의 하나의 동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1965년에 한일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조사연구를 행할 조건이 미비했음은 물론, 1960년대의 많은 일본인 지식인들은 북한에 대하여 보다 공감적이었으며,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성립한 박정희정권의 강권적인 정치체제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현상에 관한 연구는 당연히 부진했다.

현대 한국 경제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성과가 나오게끔 된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주목받게 된 1980년대부터이다. 단, 이와 같은 방향으로부터의 한국 연구는, 실은 한국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開發經濟學이나 國際經濟學的인 접근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이른 바의 NIES, 더욱이는 근년의 ASEAN 諸國이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의 일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역사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종래로부터의 한국연구자와는 공동연구를 행하는 데가

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3. 現代日本에 있어서의 歷史研究

한반도는 일본과 지극히 깊은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근대의 한 시기를 제외하면 어디까지나 외국이며, 그 역사도 당연히 외국사이다. 외국사 연구에 종사하는 자의 제1차적 관심은 대상지역의 역사발전의 독자성이나 개성의 인식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써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自國史와의 상이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국과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인식함으로써 자국사에의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 경우 19세기의 제국주의자와 같이 單線的 發展段階論을 전제로 한 發展의 先後나 優劣이라고 하는 발상을 절대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 연구는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 연구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의식이나 역사연구동향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 연구와는 문제의 설정방법이나 관심의 중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연구나 역사의식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해 둔다.

敗戰前의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연구나 역사교육은 많건 적건, 혹은 긍정·부정에 관계 없이 '皇國史觀' 즉 日本文化나 日本史를 미화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呪縛을 면하기가 어려웠다. 가령 대학연구실에서는 실증적 연구나 교육·지도가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義務教育의 현장에서는 神話가 그대로 사실로서 가르쳐지고, '萬邦無比의 國體'가 지켜세워졌다. 거꾸로 천황제 타도나 사회주의혁명을 꿈꾸는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發展段階論과 그 세계사적 관철을 신봉함으로써 일본을 상대화하고, 황국사관이나 천황제의 속박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스럽기는 했지만, 동시에 스탈린적인 一國主義革命路線을 채용함으로써 一國主義의인 역사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또는 식민지 지배라는 민족모순보다는 일본 국내에서의 계급모순을 주요한 모순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적 契機가 빈약하였다.

패전후 일본의 역사연구는 황국사관에 대한 심각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일본제국의 패망은 동시에 주변 제민족에게는 해방이었는데, 실은 많은 일본민중이나 日本 歷史研究에 있어서도 신화에 의하여 절대적 권위가 부여된 천황제나 군국주의사관으로부터의

해방이었던 것이다. 극단적인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와 그것이 초래한 미국과의 전쟁이야말로 국토와 인명을 철저히 파괴로 이끈 根源惡이라고 하는 감각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공통된 감정이었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의 중국 침략이나 1930년대의 군국주의파시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있었지만, B29의 공습과 원자폭탄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明治初 이래의 팽창정책이나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契機는 빈약했다. 오히려 자신들은 東條英機(토오조오 히데키) 등의 군인정치자들이 일으킨 미국과의 전쟁의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마저 존재하며, 그들이 동경재판에서 단죄됨으로써 일본인 모두가 면책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또 일본사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암묵적으로 알타이·포츠담선언에 의하여 결정되고, 축소된 일본 영역, 즉 本州·四國·九州에 北海道 그리고 沖繩(1972年 施政權返還)를 더한 지역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일국주의적인 역사발전 감각은 불식되기는 커녕, 日本史 = 日本國史 = 日本人史라고 하는 감각은 내향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이렇게 하여 근린의 아시아 제지역에 대해서는, 戰後의 잠시 동안은 학문적으로 등을 돌린 채였다. 戰前의 아시아 연구는, 그 조사결과에는 오늘날에도 참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륙이나 동남아시아에의 침략적 팽창정책의 사정상 조사·연구가 행해진 성격이 농후하였으므로 일본인의 자기인식에 반성을 촉구하는 契機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패전에 의하여 그러한 國策의 調査가 중단되자 학문분야로서는 중국사나 한국사를 제외하면 거의 단절상태에 있었다.⁽³⁾

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1950년에 설립된 조선학회는 舊京城帝大系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했을 뿐만이 아니라, 韓國統監府의 學政參與官이었던 幣原 坦(시데하라 타이라, 후에 台北帝大總長, 樞密院顧問官을 역임)까지도 고문으로 추대하고 있었으며, 末松保和(스에마츠 야스카즈, 京城帝大, 戰後 學習院)·池内 宏(이케우치 히로시, 東大) 등의 실증주의적 역사연구자들이 참가하고 있었지만, 역시 반성적 계기는 빈약한 것이었다.

예컨대 韓日基本條約에 반대하는 운동은 한국에 있어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문제가 중심이었으나, 일본에서는 旗田 魏(하타타 타카시) 등의 일부의 新進 한국사연구자가 그것을 지적한 것을 제외하면, 미국의 아시아 지배 강화나 베트남전쟁에의 가담으로 연결되는, 혹은 美·韓·日의 군사적 연대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으로서(한국에서의 反對論調의

(3) 이와 같은 국책적 조사가 재개되는 것은 1760년대부터이며, 대표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서는 아시아경제연구소를 들 수 있다.

내용은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일본측의 이해관심에 기초한 반대 운동이었다. 거기에는 한국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일반 일본인의 한국을 비롯한 近隣諸國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1980년대의 NIES, 그 다음으로 ASEAN의 눈부신 경제발전이 TV 등의 대중 미디어를 통하여 전하여지게 된 이후부터이며, 더욱이 1982년의 교과서문제를 계기로 하여, 근린제국의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일본의 일반대중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때로부터의 일이다. 그 이전에도 家永(이에나가)教科書訴訟(家永三郎, 前東京教育大學教授, 일본근대사전공. 1965년에 민사소송이, 1967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역사연구자는 일본의 침략적 팽창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아직 일반대중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그 2년 전부터의 NHK의 韓國語講座⁴⁾ 개시와 더불어, 한국에의 관심을 급속히 높였다. 학부·대학원의 일본인학생의 유학도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역사 연구에서도 이 1980년대 중반쯤부터 명치초 이래의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나 일본의 한국 지배, 전시중의 일본점령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각국의 역사교과서등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전해지고 있는가가 점차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계몽적 출판물을 통하여 알려졌다. 731부대의 생체실험 사실을 기술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책이 연구자가 아닌 작가의 손으로 출판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이와 관련하여, 동경대학 경제학부가 한국으로부터 객원교수를 초청하여 한국경제사나 한국경제의 강좌를 상실하게끔 된 것은 1985년부터이다. 더욱이 근년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유학생이 학위취득 후 일본의 국립·사립대학에 교원으로서 정식 채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초에 걸쳐서, 前日本軍兵士·軍屬의 社會保障訴訟이나 前軍隊慰安婦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윽고 일반 일본인의 다수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십수 년의 일본에 있어서의 역사 연구의 기초도 크게 변해 왔다. 그 하나의 방향이 日本列島에서 전개된 역사·문화가 지역에 따라, 또 계층·생업에 따라 지극히 다양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環東支那海地域·環東海(日本海)地

(4) 강좌의 제목은 실은 “안녕하십니까. 한글강좌”이다. 韓國語·朝鮮語의 어느 쪽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朝鮮籍·韓國籍의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 채용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한글어라는 이상한 표현까지 현재 일본에는 존재한다. 단, 내용은 완전히 현대의 한국어이다.

域·環오오츠크海地域이라고 하는 역사적 세계의 존재에 눈을 돌림으로써 일본은 고립한 섬나라가 아니고, 주변과의 끊임 없는 교류속에서 역사·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의 역사를 歷史通貫的으로 변하지 않는 실체로 전개된 것으로 보지 않고, 흔히 막연하게 전제되곤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근년에는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속에서 일본을 상대화하여 남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시점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⁵⁾

또 일본의 中世를 특징짓는 봉건제도의 발달에 관해서도 옛날에는 일본을 근대자본주의에 적합한 발전성의 증서로 간주하였으나(중국·한국에 대해서는 封建制缺如論을 가지고 '停滯'의 근거로 삼았다), 오늘날에는 전혀 거꾸로 동시대의 중국이나 한국이 도달해 있던 문명의 단계에 도달할 수 없었던 邊境性과 未開性의 산물로 지적하는 논의가 제출되어 연구자간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⁶⁾ '武士道'를 미화하는 바와 같은 발상은, 일부의 우익적 인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사 연구는 일국사적 발상이나 단선적 발전계층론을 극복하여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나 지역교류라고 하는 관점을 중시하고, 일본을 상대화하여 생각하는 방향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 日本史 = 日本國史라고 하는 암묵의 전제도 붕괴되었다. 先住民인 아이누족이나 그 문화, 혹은 명치초까지는 형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독립국이었던 琉球(1609년의 薩摩(사츠마)에 의한 군사점령 이래 薩摩에 의한 내정·외교에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나, 明·淸으로부터의 책봉과 琉球國王의 進貢은 계속되었다)의 독자의 역사나 문화가 소개되고, 더 나아가서는 東日本과 西日本の 사회구조나 문화적 차이는 별개의 국가 형성에까지 이를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고 하는 논의도 제기되었다⁽⁷⁾(역사적으로도 동일본에는 京都政權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고대·중세를 통하여 계속. 10세기 平將門(타이라노마사카도)의 亂. 12세기 奥州의 藤原(후지와라)氏의 平泉(히라이즈미)政權. 12세기말 鎌倉幕府의 성립). 현재의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틀을 그대로 과거에 투영하여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는 많은 역사 연구자에게 있어서 공통된 인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5) 예컨대, 일본사·한국사·중국사·동남아시아사 연구자 등에 의한 『아시아속의 日本史』 全6卷(1992-93)·『아시아로부터 생각한다』 全8卷(1993-94)의 간행.

(6) 예컨대, 入間田宣夫(1991, pp. 78-80, 331-335). 또 본문 중에는 保立道久氏가 지적하는 "廣域暴力團의인 在地領主"라고 하는 표현도 인용되고 있다.

(7) 예컨대, 日本中世史家인 網野善彦은 網野善彦(1997)에서 鎌倉幕府의 성립을 "西國과는 이질적인 풍토, 사회를 배경으로 했던 東國國家의 王權"이라 평가한다.

4.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經濟史에 대한 關心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사에 관한 연구자의 견해가 달라짐에 따라, 더 나아가서는, 실은 직접적으로는 이 쪽의 영향이 큰데, 한국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동향이 종래의 社會經濟史의 영역을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부터 鄉村社會論이나 身分制度論, 政治史 등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정밀화됨에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경제사 연구의 양상도 변화해 왔다.

1970년대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 연구,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사적 분야에까지 관계하는 연구자라고 하면 누구나 조선후기로부터 개항기, 더 나아가 식민지기에까지 걸치는데, 대표적 연구자로서 梶村秀樹(카지무라 히데키), 安秉珩의 이름을 들 수 있다. 누구나 한국이나 북한의 연구를 정확히 흡수한 위에 사회구성체나 공동체라고 하는 틀을 활용하면서 세계사적 법칙을 의식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옛날의 停滯論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일본의 한국사 연구자의 노력도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마침 한국에서도 資本主義萌芽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걸치는 시기는 옛날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어진 정체론이 조선후기의 발전적 양상이 명백히 됨에 따라 실증적으로 극복되어 간 시기이다. 정체론의 핵심적 문제점은 예컨대, 四方 博(시카타 히로시)의 전후의 논문의 한 구절이기는 하지만, “이조 오백 년간, 어떠한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四方 博(1951, p. 167))고 하는 말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에 집약되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점차로 諸制度가 문란의 도를 더하여 결국에는 식민지화된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써는 서양문물·제도를 도입한 근대화는 불가능하고, 일본의 통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점에 집약된다. 四方 자신은 호적의 분석으로부터 조선후기의 대규모적인 신분변동을 실증적으로 명백히 한 연구(四方 博(1937, 1938) 등)를 이미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은 논의를 써서 남기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정체론이 실증연구의 결과가 아니고 아프리카리하게 설정된 통치이데올로기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실로 일찍이 1933년에 白南雲이 ‘아시아적 봉건국가의 붕괴과정과 자본주의의 萌芽’를 자신의 朝鮮經濟史의 제4장으로서 예고했는데(白南雲(1933)), 이와 같은 견해는 일본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의 코민테른의 혁명노선과 관련하여 제기

된 아시아적 生産樣式論爭에서는 아시아 제지역은 古代帝國 이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정 체해 있으며, 봉건적인 것이 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약한 것으로서, 봉건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정체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었다(예컨대 조선시대에 관한 森谷克己(모리타니 카즈미)(1941)의 견해). 오히려 白의 견해는 후에 北韓歷史學會에서 주류가 된다. 북한에서도 1960년대 전반에는 조선후기의 화폐유통이나 상품생산에 관하여 그것을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어쩔 것인가로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는데, 1970년의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전석담·허종호·홍희유(1970))에서는 자본주의가 사회발전의 合法則性에 기초하여 개항 이전의 조선에서도 발전하고 있었다고 공식화되었다. 한국이나 북한의 역사연구를 도입함으로써 일본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신세대는 옛날에 자신의 先行世代가 주장했던 정체론을 1970년대에는 비판적으로 극복했으나, 조선후기의 사회변화를 어떠한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공통의 견해를 얻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즉 梶村는 한국의 개성을 인식하면서도 세계사적 기본법칙의 관철을 중시하고, 조선후기사회의 발전적 양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위에, 개항기의 국제적 요인이 일본의 경우보다도 곤란한 것이었다고 했다(歐美帝國主義·日本·中國)(梶村秀樹(1969)). 이에 대하여 安秉珩은 1975년의 『朝鮮近代經濟史研究』에서 資本主義萌芽論은 선진적 부분에만 주목한 ‘浮彫的方法’으로서 구조적 파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沮止의 요인까지도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논하면서, 重層的 土地所有關係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하에서의 중간계층의 동향이 재정적 위기를 통하여 봉건적 위기를 양성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하여 梶村는, 중간계층을 新舊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며, 상품경제의 발전에 의하여 출현한 客主동의 새로운 중간계층도 또한 二面性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⁸⁾ 그러나 梶村와 安의 논쟁은 安의 요절에 의하여 심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1980년대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조선후기의 실증적 연구가 奎章閣文書나 地方古文書의 발굴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정밀화하였다. 거기에서는 발전단계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바와 같은 논의는 별로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다수파의 이해로서 18세기 이후의 조선사회의 발전방향은, 미약하기도 하고 萌芽의이기도 했지만, 자본주의적 근대와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본구도는, 일국사적 발전에서 조선후기사회의 내부에서 자본주의로의 萌芽, 혹은 근대로의 자생적 이행을 찾아내려 한다면, 그 한에서 북한의 그것

(8) 梶村秀樹(1976). 이 논문은 安秉珩 『朝鮮近代經濟史研究』에 대한 서평이지만, 이 公刊 직후에 安이 병사했다.

과도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북한의 그것은 혁명노선상 조선시대말기가 봉건말기가 아니라면, 단계론적으로 현정권이 세계사적 역사발전의 최고의 단계일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정치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한국의 경우는 西歐의 衝擊(western impact)이 없어도 일국사적 발전 속에서 근대화본주의·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가능했다고 하는 암묵의 이해가 있는 듯하지만, 이는 근대화본주의가 가진 국제적 성격과 사회구조의 차이를 너무나도 경시한 견해인 것은 아닐까. 단순히 자본축척과 매뉴팩처어의 출현 등을 자본주의적 맹아로 본다면 중국의 明代에 이미 그것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근대화본주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경제적 지표라고 생각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서구와 동아시아의 사회구조의 차이(예를 들면 국가에 의한 경제지배의 존재형태)를 보다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연구는 한국의 연구발전을 이어받아 여러 가지 분야(鄉村社會·戶籍分析·大民法·漕運·土地制度·對外關係 등)로 확산되었으나, 어떠한 공통적인 역사구도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었다. 막연한 공통적 이해로서는, 18세기 이후의 상업이나 화폐경제의 발달은 확실하며, 신분상승의 움직임과 더불어 王朝의 收稅나 지배방식에도 커다란 발전적 변화가 보이는데, 그것이 자본주의적 근대와 바로 연속적인가 하면 아무래도 다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후 제2세대라고도 해야 할 연구자(필자는 그 맨 끝에 위치할 것이다)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전후 제1세대인 梶村는 '先祖回歸的 傾向'이라고 비판했으나, 큰 영향력은 갖지 못했다.

전후 제2세대의 이해로서는, 역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근대는 서구의 충격과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에의 편입으로써 개시되는 것이며, 한국·중국·일본은 그 국가체제나 역사적 전통에 따라 小農民經營의 성숙이나 商品經濟의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을 포함하여 자생적으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설적으로도 중국사에서는 아편전쟁, 일본사에서는 페리함대의 來航이 근대의 기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확실히 일본에서는 18세기 후반 이후 농촌수공업이 발달하고, 농촌부로부터의 상품생산은 종래의 大阪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유통구조를 해체시키면서 釀造·織布 등의 분야에서의 매뉴팩처어의 뒷받침으로 江戸·名古屋·瀬戶內海地方에서는 局地的 市場圈을 성립시킬 단계에는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구미의 과학기술이나 산업혁명을 거친 대량생산기술, 그리고 자본축척의 규모와 비교하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격차가 존재

했던 사실이나 法制度·國家制度的으로도 커다란 벽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 상식적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近代資本主義를 특징짓는 세계적인 自由貿易體制는 그야말로 외래적인 것이었으며, 아시아삼국은 어느 나라나 무력행사나 무력위협 등에 의한 타의에 의해 개항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구미자본주의를 기준으로 한 경우의 후발성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국가주도로 형성된 戰前의 日本資本主義는, 어느 정도 발전을 보이고 있었던 농촌의 사회적 분업의 발전을 억압하면서 위로부터의 軍需自給·輸入防止·外貨獲得工業化로서 성립해갔다. 그래서 재벌과 寄生地主制로 특징지워지는 戰前日本資本主義의 偏奇성이 침략적 팽창정책과 군국주의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 천황제하에서는 시민사회의식은 전혀 성숙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이미 1920년대에 山田盛太郎(아마다 모리타로오)를 비롯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지적 토양에서 단순한 공업화로서의 '近代資本主義'로의 이행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는 근대자본주의가 혁명에 의해서든지 개량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극복되지 않으면 안되는 과도적 존재라고 생각한 좌익적 혹은 사회주의적 발상의 19세기말 이래의 전통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이나 막스 웨버의 근대 비판⁹⁾이 수용되어 온 20세기 일본의 지적 배경의 존재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근년 足立啓二(아다치 케이지)를 비롯한 중견의 중국사연구자들은 秦·漢帝國 이래 2,000년을 넘는 집권적 專制國家下에서의 중국의 역사발전에 대해 서구와는 다른 유형의 발전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足立는 웨버의 화폐이론(내부화폐와 외부화폐)에 입각하여 중국에 있어서의 國家的 物流의 우월성과 그 아래서의 상업 발전의 방향성이나 화폐의 역사적 발전을 해명하려고 하였다(中國史研究會編(1990)). 세계사적인 흐름으로서는 生産諸力の 상승과 農民의 土地所有의 강화, 더 나아가 小商品生産者의 성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것이 실현되어 가는 환경이 확대재생산이나 대규모화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발전에 적합한가 어떤가는 중요한 열쇠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실로 이와 같은 연구방향은 일찍이 安秉珪가 한국사에 관하여 제시한 국가적 상품유통의 우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도 중첩되는 것이다.

필자의 관심의 중심도 安秉珪가 남긴 문제제기를 계승하면서, 혹은 足立의 문제제기도

(9) 일본에 있어서의 막스 웨버 연구의 현재를 정리하고, 近代批判者로서의 웨버의 像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山之内靖(1997)이 있다.

수용하면서, 국가적 규모로의 物流, 그 자체까지도 비상업적 수단(官營의 漕運, 現物貢納制)에 의하여 운영하려고 한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국가의 設計圖內에서, 상업이 어떻게 위치지워지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갔는가, 그리고 18세기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간 상업활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발전되었던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상업적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항기의 일제에 의한 경제적 침투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가 하는 점에 있다(須川英德(1994)). 이것은 근대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위에 그것과의 거리를 가지고 先進·後進이라고 하는 위치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가체제와 상업과의 관계에 관한 유형화작업이며, 그 구조를 해명하려는 작업인 것이다.

일본인의 입으로는 지극히 말하기 어려우나, 필자가 느끼고 있는 바를 어떤 한국인 연구자의 발언을 빌려서 대신하기로 한다. “어차피 근대화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19세기 후반에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갖지 않았다고 할 경우, 우리가 어떤 근대를 맞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인가. …… 다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 외부세계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는 자주적 근대화의 전망이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외세(즉 일제)에 의해 비로소 근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이식근대화론적 설명 역시 비역사적이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논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판이 필요하지만, 이 토론회의 쟁점의 하나로 내세워진 것처럼, 조선후기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자주적 근대화의 전망이 가능했는데, 개항으로 인해 그것이 왜곡, 저지되었다는 관점도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던 개항과 외부세계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당시의 지배권력의 대응방식과 그 조건으로서의 제도적 구조라는 구체적 역사과정에서 찾아야지, 지레 결정론이나 숙명론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김필동(1996, p. 87)).”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의 前近代韓國經濟史에의 관심동향과 韓國經濟史 理解는 전근대한국경제사 분야의 연구자가 지극히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화할 만큼 명확한 형태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일본과의 비교에서 각각의 특징을 밝히려고 하는 방향으로 중국사·일본사 연구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한·일의 연구자에 의한 공동연구결과도 많은 성과가 公刊되기에 이르렀다. 혹은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구조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단서로서 근년 화폐의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1997년도의 역사학연구대회에서 화폐를 공통과제로 하고, 나아가 1998년 6월 간행의 『歷史學研究』는 ‘화폐로 본 동아시아 세계’를 특집했다. 일본사·중국사는 모두 일본에서는 학문적 축척이 있으나, 한국사 특히 경제사 분야에 관한 축척은 유감스럽게도 지극히 적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

다. 금후 한국의 경제사 연구자와의 교류확대가 절실히 요망된다.

동아시아의 전근대에 있어서도 지역간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나 정보의 교환, 더 나아가서는 중국을 축으로 하는 국제관계는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극히 컸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근대국민국가의 틀을 전근대에 그대로 적용한 -國發展史的 발상만으로는 동아시아세계의 독자성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개성적 발전상까지도 보지 못하게 한다.

5. 맺음말에 가름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 연구의 의의는 첫번째로 일본에도 한국사 연구자가 있어서 얼마간의 연구결과를 역사연구자를 상대로 발표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그러한 연구성과를 대학의 연구실 안에만 쌓아둘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계몽적인 출판활동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근년에서와 같이 복고적 近代史像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선전하는 '自由主義史觀' 등의 횡행(그 간판인 東大教授 藤岡信勝(후지오카 노부카츠)는, 교육학 전공으로서 역사연구자는 아니다)을 보면, 후자의 활동에야말로 중점이 놓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후지·産經(후지·산케이)그룹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익적 보도기관이나 보수적 정치인을 배경으로 하는 그들에 대하여 개개의 역사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약하다.⁽¹⁰⁾ 그러나 그러한 보수반동적인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일본이 한국·중국·동남아시아에서 저질러온 일이 점차로 일반시민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한 반동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은 그렇다고 치고, 학문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 것인가. 근년의 한국 연구에 있어서의 실증적 정밀화나 史料의 광범한 활용 상황, 혹은 젊은 연구자가 제출한 질 높은 박사논문 등을 보면,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 연구가 史料 수준에서는 한국의 그것에 따라가는 일 자체가 점차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후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 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타분야의 연구 축척(일본사·중국사 등)

(10) 藤岡가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司馬遼太郎(시바 료오타로오)의 역사관에 대하여 비판한 것으로는 中村政則(1997)이 있다. 司馬遼太郎는 역사소설가이며, 역사연구자는 아니다. 또, 藤岡一派에 대하여 千葉大學의 역사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공개심포지엄을 통해 반론한 것으로는 中村政則·吉見義明·宮田筋子·趙景達 他(1997)이 있다. 혹은, 藤岡一派가 즐겨 공격대상으로 하는 軍隊慰安婦에 관해서도 吉見義明(1995)을 비롯한 실증적인 반론이나 史料集의 간행 등을 들수 있다.

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한국사 연구에 살리는 일일 것이다. 근래 일본에 있어서의 地域間 交流나 比較史的인 발상, 그리고 일본을 아시아 전체 속에서 상대화하여 생각한다고 하는 역사 연구의 동향에서 본다면, 일본의 역사 연구 현장에서의 한국사 연구성과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으며, 금후 한층 증대하여 갈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한국에서의 한국사 연구에 조그마한 지적 자극을 준다고 한다면, 외국의 한국사 연구자로서 커다란 영광일 것이다.

橫濱國立大學 教育人間科學部 助教授

240-8501 日本國橫濱市保土ヶ谷區常盤臺79-2

전화: 81-45-339-3350

팩시: 81-45-339-3350

參 考 文 獻

- 김필동(1996): “토론: 19세기 근대로의 이행인가, 반동인가,” 『역사비평』 35, 겨울.
- 전석담·허종호·홍희유(1970):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社會科學出版社; 일본어역(1972), ‘朝鮮における資本主義的關係の發生,’ 『朝鮮學術通報』 9, 1·2·4·5·6.
- 溝口雄三 他編(1993-1994): 『アジアから考える』 全8卷, 東大出版會
- 吉見義明(1995): 『從軍慰安婦』, 岩波新書.
- 網野善彦(1997): 『日本社會の歴史(中)』, 岩波新書.
- 梶村秀樹(1969): ‘朝鮮から見た現代東アジア,’ 『講座現代中國』 第1卷, 大修館書店; 梶村秀樹(1982), 『朝鮮史の枠組と思想』, 研文出版에 加筆하여 再收錄.
- _____ (1976): ‘朝鮮における移行法則,’ 『商經論叢』 11. 3·4, 神奈川大學; 梶村秀樹(1982), 『朝鮮史の枠組と思想』에 再錄.
- 白南雲(1933):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 四方 博(1937): ‘李朝人口に關する一研究,’ 京城帝大法學會論集 第9冊, 『朝鮮社會法制史研究』.
- _____ (1938):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考察,’ 京城帝大法學會論集 第10冊, 『朝鮮

經濟の研究』 제3.

_____ (1951): '舊來의 朝鮮社會의 歷史的인 性格에 關하여,' 『朝鮮學報』 2.

山之内靖(1997): 『マックス・ウェーバー入門』, 岩波新書.

森谷克己(1941): '朝鮮社會經濟史概論,' 山口高商, 『東亞經濟研究』 25. 3.

須川英徳(1994): 『李朝商業政策史研究』, 東大出版會.

安秉珩(1975): 『朝鮮近代經濟史研究』, 日本評論社.

入間田宣夫(1991): 『日本の歴史 ⑦: 武者の世に』, 集英社.

鄭在貞(1996): "1980年代 日帝時期經濟史研究의 成果와 課題," 역사문제연구소편, 『韓國의 '近代' 와 '近代性' 批判』, 역사비평사.

中國史研究會編(1990): 『中國專制國家と社會統合』, 文理閣.

中村政則(1997): 『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 — 司馬史觀を問う —』, 岩波ブックレット 427.

中村政則・吉見義明・宮田節子・趙景達 他(1997): 『歴史と眞實』, 筑摩書房.

荒野泰典 他編(1992-1993):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全6卷, 東大出版會.